

여연브리프

트렌드분석 및 빅데이터실
김장우 연구위원

대통령 지시 두 달 만에 22배,
7,925억 원 청년문화패스
—2027년 예산 확대안 결정경과 및 온라인 여론 분석—

2026년 10월 6일



대통령 지시 두 달 만에 22배, 7,925억 원 청년문화패스 -2027년 예산 확대안 결정경과 및 온라인 여론 분석-

여의도연구원 트렌드분석 및 빅데이터실 김장우 연구위원

**대통령 지시 두 달 만에 예산 22배, 19~34세 매년 지급
집행률 51.2%에 국회 2년 연속 개선 요구, 영화 이용 80%
뉴스 댓글 부정 95.2%, 재정·선심성 비판, 유럽은 감액·종료**

22배 증액: 19~34세 누구나 매년, 줄이기 어려운 지출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바꾸고 예산을 올해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늘렸다. 19·20세에게 생애 한 번 주던 지원을 19~34세 누구나 매년 신청해 34세까지 최대 16회 받는 구조로 바꾸고, 1인당 국비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으로 정했다. **증액분 7,564억 원은 문체부 예산 증가분의 42.5%**다. 재원은 추가세수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인데, 매년 지급 구조는 한 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은 반복 지적·집행 부진 사업 16개(12조 9,961억 원)가 이 기금으로 옮겨지며 이 사업도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지시 두 달 만에 확정, 이용 실적(수요 추계) 아닌 인원 기준(산식) 편성

확대안은 2026년 7월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이 만족도 높은 사업의 확장 방안을 기획하라고 지시한 뒤 두 달 만에 예산안에 반영됐다**. 22배는 지원 인원을 28만 명에서 약 643만 명(보도된 적격 인원 919만 명의 70%)으로 늘린 결과와 부합하며, 이용 실적이나 수요 추계에서 규모를 도출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체부는 신청이 예산을 넘으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7,925억 원이 상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발표 직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18~29세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1%로 전 연령대 최저였다. 지지율과 확대 결정의 인과는 확인할 수 없지만, 청년 지지율이 가장 낮은 시점에 청년 예산 43조 3,000억 원과 함께 발표된 정황은 국회가 짚을 대목이다.

누구의 문화를 키우나: 영화 80%, 콘서트·뮤지컬 79.0%

2026년 상반기 이용 38만 7,811건의 80%가 영화였고 결제액 상위 30개 작품이 이용 건수의 62.9%였다는 의원실 자료 보도가 있으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흥행작 세금 지원으로 변질됐다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2025년에도

사용액 117억 4,101만 원의 79.0%가 콘서트·뮤지컬이었고, 클래식·무용·국악 비중은 2024년 13.3%에서 2026년 상반기 1.36%로 낮아졌다. 비중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원금이 콘서트·영화로 옮겨 간 방향은 분명하다. 집행도 부진해 총 예산 집행률은 2024년 31.2%, 2025년 51.2%였고, 여야 의원실이 2024년부터 집행 부진과 지역 편중을 거듭 지적했으며 국회 문체위는 2년 연속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24년 예매 가능 공연·전시 901건 중 694건(77%)이 서울에 있었다.

유럽은 감액·종료·선별로 가는데 한국은 반대 방향

프랑스 감사원은 도서 편중과 효과 평가 수단 부재를 지적했고,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2025년 18세 지원액을 300유로에서 150유로로 줄였다. 독일은 연방감사원이 종료를 권고했고 KulturPass는 2025년 말 끝났다. 이탈리아는 2024년 소득·성적 기준 선별로 바꿨고, 보편 지원을 유지한 스페인도 400유로를 현장 예술과 실물·디지털 상품으로 나눠 용도를 묶었다. 재정 여건이 나빠지자 보편 바우처는 조정 대상이 됐다. 한국 정부안은 소득 기준 없이 대상과 지급 횟수를 함께 늘리는 반대 방향이며, 영화 횟수 제한·도서 한도 외의 용도 설계와 성과 평가 수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온라인 여론: 뉴스 댓글 95.2% 부정, 재정 부담·선심성 비판

패스 관련 네이버·다음 뉴스 댓글 870건의 판정 결과 95.2%가 부정이었고, **부정 댓글의 32.1%에 재정 부담, 22.3%에 선심성·매표 어휘가 들어 있었다.** 검색량은 확대안 발표가 아니라 신청·발급 시점에 몰려, 발표일(8월 28일, 9월 1일, 9월 4일)의 검색량은 8월 10일 추가 발급 시작일의 5.7~39.2%에 그쳤다. 긍정 반응은 커뮤니티 취미·팬덤 게시판(64건 중 62.5%)에서만 우세했고 시사·경제 게시판은 84.4%가 부정이었다. 뉴스 댓글이 여론 전체는 아니지만, 재정 지속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설명 없이는 확대안이 넓은 동의를 얻기 어렵다.

결론: 조건 없는 22배 증액 대신 공개·단계·평가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목표는 유효하다. 다만 적격 인원과 지역별 수요조차 확인되지 않은 22배 증액을 조건 없이 승인할 수는 없다. 국회는 적격 인원·수혜율·단가의 산정 근거와 지역별 수요를 먼저 제출받아 단계적으로 집행하게 하고, 공연·전시 전용액과 영화·도서 한도를 지역 공급에 맞춰 설계하며, 저소득 청년 가산과 문화누리카드·지자체 사업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장르별 이용과 환수, 신규·지속 관람, 가격 변화의 공개·평가 조건을 예산 부대의견에 명시하고, 세수 여건이 바뀔 때의 조정 방안도 확대 전에 정해야 한다.

I. 청년문화패스 확대 개편 개요

1. 제도 변천

□ 2024년 시범 사업 이후 대상·금액·사용처 단계적 확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년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다.¹⁾ 문체부는 2024년 19세 청년 16만여 명에게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고,²⁾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사는 2005년생이면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시도별로 정한 인원 안에서 신청순으로 발급했다.³⁾ 지원금은 국비 10만 원에 지방비를 최대 5만 원까지 더하는 방식이었다.⁴⁾ 사용처는 뮤지컬·클래식·연극 등 공연과 전시였고, 같은 해 11월부터 대중음악 콘서트가 더해졌다.⁵⁾

2025년에는 19세 16만 명이 대상이었고,⁶⁾ 예산은 170억 원이었다.⁷⁾ 2026년 정식 사업이 되면서 대상은 19·20세 28만 명으로 늘었고, 지원금은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으로 올랐다. 사용처에는 영화가 들어갔으며, 영화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도권 2회, 비수도권 4회로 이용 횟수를 제한했다.⁸⁾ 8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은 하반기 추가 발급(11월 30일까지)부터 지원 분야에 도서가 더해졌다.⁹⁾ 2026년 예산은 361억 원이다.¹⁰⁾

2027년 정부안은 사업 이름을 '청년문화패스'로 바꾸고 지원 대상을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19~34세 전체로 넓혔다.¹¹⁾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며, 체육활동도 이용 분야에 들어간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매년 지급해 34세까지 최대 16회 받을 수 있다.¹²⁾ 1회 지원액은 2026년보다 5만 원 적지만, 문체부는 지급 횟수가 늘어 전체 수혜 금액은 커진다고 설명했다. 대상 인원은 약 919만 명으로 보도됐으나,¹³⁾ 본 보고서는

1) 머니투데이방송(MTN), 「'만족도 97%' 청년 문화예술패스, 꿀맛보는 사람들 늘었다 [엔터그알]', 2026.3.13.

2) 문화체육관광부, 「청년 문화예술패스' 도입...19세 16만명에 최대 15만원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3.12.28.

3) 문화체육관광부, 「"28일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신청순 발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4.3.27.

4) 아주경제, 「세계적 작품 위해 대규모 지원·19세 청년에 '문화예술패스」, 2023.12.28.

5) 뉴스핌, 「2024 청년문화예술패스 28일 만료..."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2025.2.19.

6)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025.12.

7) 헤럴드경제, 「문체부 예산 10.3% 늘어난 7.8조원...'K-컬처 300조원' 시동」, 2025.9.5.

8) 문화체육관광부, 「19·20세 청년에 '문화예술패스' 발급...최대 20만 원까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2.9.

9)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하반기 추가 발급...도서 구입도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8.10.

10) 문화체육관광부, 「2027년 정부예산안 사전브리핑」 녹취(기획조정실장·문화정책과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9.4.

11)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내년 예산 첫 9조 원 돌파...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9.4.

12) 청와대, 「내년에 (2027년) 만 19세~34세 주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2026.8.30.

13) 더팩트, 「조은희 "청년문화패스, '홍행작 세금지원'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2026.9.4.

정부 발표 자료에서 이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기획예산처 자료를 분석해 밝힌 2027년 지원 인원은 약 643만 명으로,¹⁴⁾ 919만 명에 수혜율 70%를 적용한 값과 같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의 19~34세 인구는 2027년 985만 4,000 명으로¹⁵⁾ 보도된 대상 인원보다 66만 명가량 많다. 2026년과 비교하면 예산은 약 22배, 대상은 보도된 인원 기준 약 33배다. 본 보고서는 두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 ‘청년문화패스’로 적는다.

□ 정부 확대 근거: 세대 내 형평성 및 청년기본법 연령 기준

문체부는 현행 사업이 19·20세 가운데 28만 명만 대상으로 하고 생애 한 번만 지원해 문화 경험을 쌓아 가기 어렵고, 세대 내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¹⁶⁾ 학업·취업 준비가 길어져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는 상황과 청년기본법상 지원 대상 연령(19~34세)도 확대 근거로 들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인원 16만 명을 청년의 ‘2% 수준’으로 적었다. 2025년 이용자 만족도는 96.6%였고,¹⁷⁾ 2026년 이용자 설문에서는 89.2%가 향후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4년 이용자 온라인 설문에서는 응답자 2,627명 중 56.7%가 패스를 전액 사용한 뒤 추가 관람 경험 있다고 답했다.¹⁸⁾ 이는 자기보고 결과로서 사업의 순효과나 장기 지속 이용률과는 구분해야 한다.

[표 1] 청년문화패스 제도 변화¹⁹⁾

구분	대상	지원 방식·금액	사용처	예산(국비)
2024년 (시범 사업)	2005년생(19세) 16만여 명, 시도별 신청순	1인 최대 15만 원 (국비 10만 원+ 지방비 최대 5만 원)	공연·전시, 11월부터 콘서트	170억 원
2025년 (시범 사업)	19세 16만 명	최대 15만 원	공연(콘서트 포함)· 전시 관람 등	170억 원
2026년 (정식 사업)	19·20세 28만 명	생애 1회,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	공연·전시·영화 (횟수 제한), 8월부터 도서	361억 원
2027년 (정부안)	19~34세 전체 (약 919만 명, 보도)	매년 (34세까지 최대 16회), 국비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전액 국비	공연·전시·영화· 도서·체육	7,925억 원

※ 2024~2025년은 시범 사업, 2026년은 정식 사업, 2027년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

14) 뉴시스, 「미래기금 이관사업 30%가 국회 지적한 '부실 사업'...예산만 13조」, 2026.9.14.

15) 국가데이터처, 「인구상황판: 청년인구(19~34세)」(장래인구추계), 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2026.9.24. 접속.

16)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설명자료, 「청년세대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에 확대 반영했습니다」, 2026.9.15.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17)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 안내, 2026.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및 발급 시작! 2006년생 최대 15만원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2025.3.6.

19) 핀포인트뉴스, 「윤영석 의원, 미래대응기금 이관 16개 사업 부실 지적」, 2026.9.14.; 앞의 각주 1~13, 16의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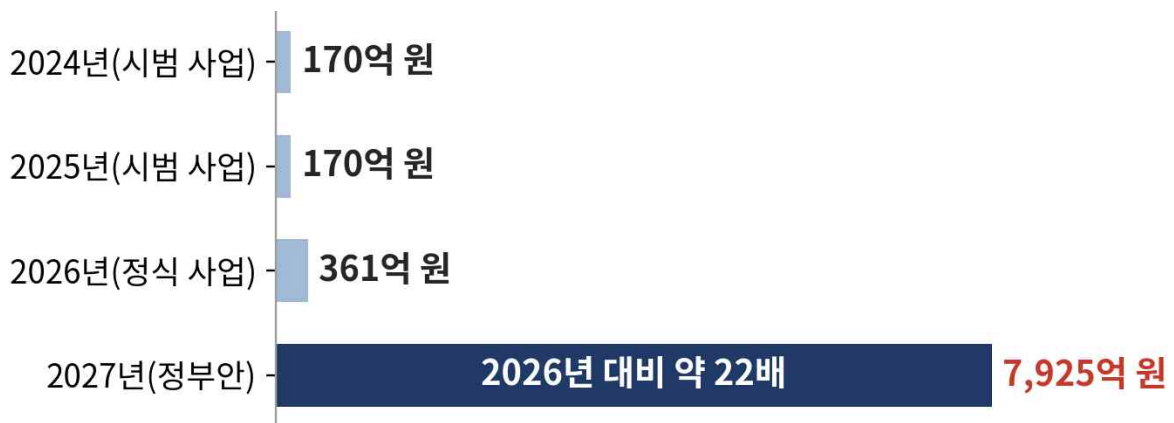
2. 2027년 예산안 내 비중 및 재원

□ 문체부 예산 증가분의 42.5%가 청년문화패스 증액분

문체부의 2027년 예산안은 9조 6,345억 원으로 올해보다 22.6% 늘었다. 2026년 본예산 7조 8,555억 원²⁰⁾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1조 7,790억 원이다. 청년문화패스 예산 7,925억 원은 문체부 예산안의 8.2%를 차지한다. 2026년 대비 증액분 7,564억 원은 문체부 예산 증가분의 42.5%에 해당한다(원자료로 산출).

같은 예산안의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생태계 예산은 2,406억 원,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11억 원으로 보도됐다.^{21)·22)} 청년문화패스 예산은 문화기술 생태계 예산의 약 3.3배,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약 25배다. 저소득층 문화바우처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2027년 예산안 3,221억 원과 비교하면 약 2.5배다(원자료로 산출).

[그림 1] 청년문화패스 예산 추이²³⁾



※ 예산은 국비 기준(2025년 지방비 포함 총예산은 229억 5,140만 원). 2024~2026년은 확정 예산, 2027년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

□ 재원은 추가세수 기반 미래대응기금, 편성 기준은 수혜율 70%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162조 3,000억 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의 4대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²⁴⁾ 문체부는 청년문화패스 예산이 청년·지역 등을 목적으로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지는 사업 가운데 16개 사업(12조 9,961억 원)이 반복 지적이나

20) 서울경제, 「문체부 2026년 예산 7조8555억원 확정...국회서 593억원 증액」, 2025.12.3.

21) 뉴스1, 「2027년 문화기술 예산안 2406억원 편성...문화기술 생태계 기반 구축」, 2026.9.8.

22) 부산일보, 「문체부 내년 예산안 9.6조...예술인 기초생활보장 강화」, 2026.9.7.

23) 투데이신문, 「[데이터 파콘]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 74%에도 이용은 절반에 그쳐」, 2026.7.28.; 앞의 각주 7, 10, 11, 19의 자료 참조.

24) 기획예산처,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9.1.

집행 부진이 확인된 사업이며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필요한 사업은 지원 내용을 전면 개편해 반영했다는 입장이다.²⁵⁾

문체부는 2026년 예산을 수혜율 30% 정도로 편성했고, 2027년에는 자원 부족으로 신청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수혜율을 70%로 올려 편성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19~34세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수요가 예산을 넘으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70%는 지급 자격의 상한이 아니라 예산 편성 가정이다. 정부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상 919만 명'을 분모로 정부안 7,925억 원을 나눠 산출한 평균 지원액 약 12만 3,000원을 다시 예산 추계의 독립된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적격 인원, 수도권·비수도권 비중, 신청·사용·환수 전망을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V장 1절).

3. 확대 결정의 경과와 배경 상황

□ 산식으로 본 22배: 지원 인원 23배, 적격 인원 확대와 수혜율 30%에서 70%

22배라는 증가 폭은 지원 인원의 변화로 대부분 설명된다. 2026년 발급 정원 28만 명은 19·20세 적격 인원 수혜율 30%를 적용한 규모이고,²⁶⁾ 2027년 지원 인원은 윤영석 의원실이 기획예산처 자료를 분석해 밝힌 약 643만 명으로, 보도된 적격 인원 919만 명에 수혜율 70%를 적용한 값과 같다. 지원 인원은 약 23배 늘고, 예산을 인원수로 나눈 1인당 금액은 12만 9,000원(361억 원÷28만 명)에서 12만 3,000원(7,925억 원÷643만 명)으로 조금 낮아져 두 변화를 곱하면 22배와 부합한다. 1인당 지원액은 5만 원 줄었고, 생애 1회 지급이 매년 지급으로 바뀐 점은 2028년 이후 누적 소요를 키우는 요인이다. 예산 규모는 적격 인원 수혜율과 단가를 곱한 산식과 부합하며, 장르별 이용 실적이나 수요 추계에서 규모를 도출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본 보고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없다.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자원 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수혜율을 높였다고 설명했고,²⁷⁾ 문화정책과장은 신청했는데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필요하면 추가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²⁸⁾

□ 대통령 지시에서 예산안까지 두 달

확대 결정은 2026년 7월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작됐다. 청와대 청년담당관이 문화예술패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수혜 대상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예산 규모를 물은 뒤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과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보라고 지시했다.^{29)·30)}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은 최근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으로 조성하라고 주문했다. 8월 5일 문체부 업무보고를 앞둔 사전 브리핑에서 김영수 제1차관은 수혜 연령, 수혜율, 혜택 장르를

25) 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미래대응기금에는 추가세수를 통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2026.9.14.

26) 문화체육관광부,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 63% 육박... '왕사남' 등 관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3.6.

27) 뉴스핌, 「[2027 예산안] 청년·지역·콘텐츠에 초점... '국민주권정부' 맞춤 전략적 편성」, 2026.9.4.

28) 중소기업신문, 「문체부 예산 첫 9조원대 진입... 내년 22.6%↑ "2000년 이후 최대폭"」, 2026.9.4.

29) 파이낸셜뉴스, 「'이 대통령' "추가 세수, 미래세대 투자 재원으로"」, 2026.7.2.

30) 뉴시스, 「이 대통령 "정책 추진 과정 충분한 의견 수렴 중요... 청년 체감 정책 다양한 목소리 경청해야"」, 2026.7.2.

늘리는 세 가지 방법을 다 해 보려 하며, 구체적 범위는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고 대폭 확대 방향은 합의된 것 같다고 말했다.³¹⁾ 8월 14일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정책 노력이 몸에 느껴질 만큼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며 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고,³²⁾ 8월 28일 청와대 ‘청년 예산 연박싱 2027’에서 청년을 기회도 적고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약세대로 규정했으며, 같은 행사에서 정부는 19~34세 확대안을 발표했다.^{33)·34)} 9월 1일 정부 예산안과 9월 4일 문체부 예산안이 뒤따랐고, 9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은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패스의 예산·지원 대상·사용처를 다시 확인했다.³⁵⁾ 지시부터 예산안 발표까지 두 달이며(표 2), 이 기간에 적격 인원 추계나 장르별 수요 전망이 공개된 자료는 본 보고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없다.

[표 2] 청년문화패스 확대 결정 경과(2026년)³⁶⁾

시점	계기·주체	주요 내용
7.2.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청년담당관이 체감도·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대통령은 확장 방안과 다른 정책 응용 방안 기획을 지시, 추가 세수의 미래세대 투자 재원 조성 주문
8.4.~5.	문체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제1차관, 수혜 연령·수혜율·혜택 장르 확대 “세 가지를 다 해보려고 한다”, 대폭 확대 방향 합의 (예산 당국과 협의 중)
8.14.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	대통령 “몸에 느껴질 만큼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건 아니다”, 청년정책 전반 점검 언급
8.25.~27.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정황)	대통령 직무 긍정 42%(전주보다 3%p 하락), 18~29세 31%로 전 연령대 최저, 30대 35%
8.28.	청년 예산 연박싱 2027	2027년 청년 예산 43조 3,000억 원(올해 28조 2,000억 원), 청년문화패스 19~34세 확대 발표, 대통령 “진정한 의미의 취약세대”
9.1.	2027년 정부 예산안	추가세수 162조 3,000억 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 등 4대 분야 45조 4,000억 원
9.3.~4.	문체부 예산안 발표 (사전 브리핑)	7,925억 원, 수혜율 70%, 신청자가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추가 협의(문화정책과장), 지역 문화예술계에 “간접적인 예산 효과”(기획조정실장)
9.11.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통합문화이용권·청년문화패스의 예산·지원 대상·사용처 확인
9.15.	문체부 보도설명자료	세대 내 형평성, 청년기본법 연령, 만족도 96.6%, 상반기 발급률 94.7%

※ 날짜는 2026년. 갤럽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001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31) 뉴스핌, 「8월 내 홀드백 제도 윤곽·복합형 돔구장은 2개 지역 공모...‘K컬처’ 지역으로」, 2026.8.5.

32) 문화일보, 「李 “청년세대, 기회 없어 좌절...근본적 반성하고 점검”」, 2026.8.14.

33) 관계부처 합동, 「내년 청년정책에 43조 투입...취업부터 주거·혼인·출산 집중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8.28.

34) 머니투데이, 「“청년이 진짜 취약세대”...李, 정부에 “내 아들·딸이라 여기고 정책 만들라”」, 2026.8.28.

35) 머니투데이, 「李 대통령, 예술인 지원방안 보고받고 “佛 소피카 제도 연구해 보라”」, 2026.9.11.

36)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73호(2026년 8월 4주)」(8월 25~27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3.1%p), 2026.8.28.; 에너지경제, 「역대 최대 청년예산 43조 푼다...李대통령 “경제적 기회 가장 중요”」, 2026.8.28.; 앞의 각주 10, 11, 16, 24, 27~35의 자료 참조.

□ 정부가 밝힌 근거와 재정·정치 상황

정부 발표 자료가 밝힌 근거는 세대 내 형평성, 청년기본법상 연령, 청년의 자립 지원, 이용자 만족도 96.6%와 2026년 상반기 발급률 94.7%다.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이 문화예술을 충분히 누리 미래를 대비하고 지역 문화예술계에도 간접적인 예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도 겹친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 3,000억 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청년 등 4대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2027년 청년 예산은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청년문화패스 증액분 7,564억 원은 문체부 문화예술 분야 예산 증가분의 약 64%라는 보도가 있다.³⁷⁾ 정치 상황도 겹친다. 확대안 발표 직전인 8월 25~2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2%로 전주보다 3%p 낮아졌고, 18~29세는 31%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30대는 35%였다. 9월 8~10일 조사에서도 18~29세 31%, 30대 35%였다.³⁸⁾ 대통령은 8월 14일과 28일 청년 세대의 좌절과 취약성을 거듭 언급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사업이 흥행작 세금 지원으로 변질됐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고, 뉴스 댓글에서는 선심성·매표 어휘가 부정 댓글의 22.3%에 나타났다(Ⅳ장 4절).

본 보고서는 상황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확대 규모는 대통령 지시 뒤 두 달 만에 정해졌고 적격 인원·수혜율과 단가를 곱한 산식과 부합하며, 장르별 이용 실적이나 수요 추계에서 규모를 도출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재원은 추가세수 기반 기금에서 조달되며, 기획예산처는 이관 사업이 국회 지적 사업이라는 비판에 필요한 사업은 전면 개편했다는 입장이다. 셋째, 청년층 지지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시점과 발표가 겹치지만 정부 발표 자료는 세대 내 형평성과 만족도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지율과 확대 결정 사이의 인과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 심사에서는 확대 규모가 어떤 추계에서 나왔는지, 산식의 각 항인 적격 인원·수혜율·단가의 근거 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Ⅴ장 1절).

37) 아주경제, 「청년 문화 향유에만 8천억 뚫는다...문체부 내년 예산 첫 9조원」, 2026.9.4.

38)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75호(2026년 9월 2주)」(9월 8~10일), 2026.9.11.

II. 이용 실적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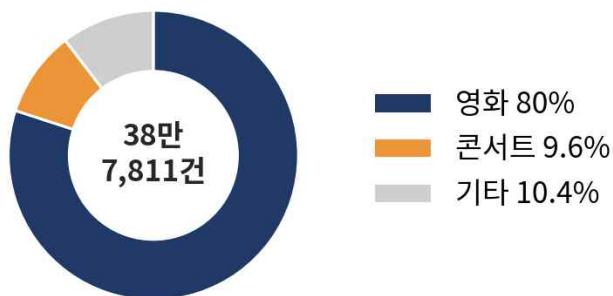
1. 영화 중심 이용 및 기초예술 위축

□ 2026년 상반기 이용 80%가 영화, 상위 30개 작품이 이용 건수의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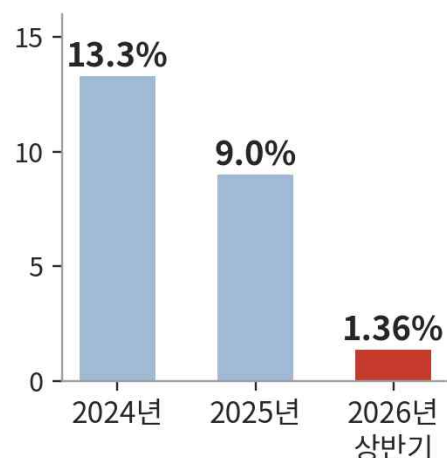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 38만 7,811건 가운데 영화가 80%, 콘서트가 9.6%였다.³⁹⁾ 결제액 상위 30개 작품의 이용은 24만 3,817건으로 전체의 62.9%였고, 영화 세 편에 14만 3,357건이 몰렸다. 국회 결산 심사 발언에서는 영화가 전체 이용금액의 41.2%라는 수치도 나왔지만 집계 기간이 제시되지 않았다.⁴⁰⁾ 영화 건수 비중 80%와 금액 비중 41.2%는 분모와 집계 기간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그림 2] 2026년 상반기 이용 구성 및 기초예술 이용 비중

(가) 2026년 상반기 이용 구성



(나) 기초예술 이용 비중



※ 조은희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 기준. 기초예술은 클래식·무용·국악 등. '기타 10.4%'는 100%에서 영화·콘서트 비중을 뺀 값

□ 기초예술 이용 비중 13.3%에서 1.36%로 하락

클래식·무용·국악 등 기초예술의 이용 비중은 2024년 13.3%, 2025년 9.0%, 2026년 상반기 1.36%로 낮아졌다는 보도가 있다. 하락 폭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4.3%p, 2025년에서 2026년 상반기 사이 7.64%p다. 같은 기간 대중음악 콘서트와 영화가 순차적으로 사용처에 추가됐다. 그러나 연도별 전체 이용 규모, 집계 기간, 장르 분류가 달라 이 비중 변화만으로 개별 장르의 절대 관람 감소나 사용처 확대의 인과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다. 도서는 2026년 8월부터 지원 분야에 더해져 상반기 수치와는 관계가 없다.

39) 앞의 각주 13의 자료 참조.

4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26.8.31.

영화가 들어오기 전인 2025년에도 이용은 일부 장르에 몰려 있었다. 투데이신문이 정보 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사용액 117억 4,101만 원 가운데 콘서트와 뮤지컬에 쓰인 금액이 92억 7,352만 원으로 79.0%였고, 국악 이용은 235건에 그쳤다.⁴¹⁾

대중음악 콘서트 허용 전후는 의원실 자료와 정보공개 자료로 비교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력 예매처에서 패스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은 뮤지컬 18억 2,100만 원, 클래식·무용·국악 5억 7,600만 원, 연극 3억 7,400만 원, 전시·행사 1억 5,500만 원으로, 네 장르 결제액 합계 29억 2,600만 원의 62.2%가 뮤지컬이었다.⁴²⁾ 콘서트 허용(2024년 11월) 뒤 발표된 첫 연간 자료인 2025년에는 사용액 117억 4,101만 원 가운데 콘서트가 53억 244만 원(45.2%), 뮤지컬이 39억 7,108만 원(33.8%)이었고, 이용 건수 비중은 콘서트 27.3%, 뮤지컬 26.1%, 전시 23.2%, 연극 14.3%, 클래식 7.4%, 무용 1.5%, 국악 0.1%였다. 클래식·무용·국악을 합한 9.0%는 조은희 의원실 자료의 2025년 기초예술 비중과 같다. 두 자료는 집계 기간(2024년은 3~8월, 2025년은 연간)과 예매처 범위가 달라 같은 분모로 비교할 수 없고, 2024년 자료에는 11월에 허용된 콘서트가 들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콘서트 허용 뒤 사용액의 절반 가까이가 콘서트로 옮겨 가고 뮤지컬과 기초예술의 비중이 낮아진 방향은 분명하다. 장르별 비중은 원자료의 금액과 건수로 산출했다.

서울시의 별도 사업인 서울청년문화패스는 공연·전시 중심으로 운영됐고,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관람 장르를 연극 34.4%, 뮤지컬 21.9%, 전시 20.9%라고 발표했다.⁴³⁾ 전국 사업과 지원 연령, 거주 조건, 작품 선택 범위, 기간, 집계 분모가 달라 이 차이를 사용처 제한의 효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공연·전시 장르의 이용을 목표로 하는 사업 설계를 비교할 국내 사례는 된다.

2. 집행 부진 및 지역 편차

□ 영화 추가 전 발급률 74~80%·이용률 34~51%, 추가 후 발급률 94.7~94.8%

사용처에 영화가 들어가기 전에는 발급과 집행이 계획에 못 미쳤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발급률은 2024년 79.8%, 2025년 74.2%였고, 예산 대비 이용률은 2024년 34.3%, 2025년 51.2%였다.⁴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기획예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국비 예산 170억 원 가운데 집행액은 42억 4,100만 원(24.9%)이고 95억 1,000만 원이 이월됐다.⁴⁵⁾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서는 지방비를 포함한 2024년

41) 앞의 각주 23의 투데이신문 자료 참조.

42) 일요서울, 「허울뿐인 K-POP 문화강국... '문체부' 300억 사업 두고 실적 올리기 급급?」, 2024.9.24.

43) 서울특별시, 「청년 문화 선택지 넓히는 서울시...서울청년문화패스 24세까지 늘리고 사용해도 개선」, 2026.8.17.

44) 앞의 각주 17의 자료 참조.

45) 앞의 각주 19의 핀포인트뉴스 자료 참조.

총예산 233억 원의 집행률이 31.2%, 2025년 총예산 229억 원의 집행률이 51.2%였고 2025년 미집행 예산은 112억 원이었다.^{46)·47)} 예산 대비 이용률과 국비 집행률은 분모와 집계 시점이 달라 함께 적되 같은 지표로 보지 않는다(표 3 주석).

2026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 문체부는 8월 31일 국회 결산 심사에서 발급률이 94.8%, 발급자 가운데 이용률이 93.8%라고 답했다. 그러나 9월 15일 보도설명자료는 2026년 상반기 발급률을 94.7%로 적어 두 공식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⁴⁸⁾ 집계 시점이나 산식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체부 제1차관은 콘서트와 영화를 넣자 집행이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도서는 8월부터 추가돼 상반기 발급률 변화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발급과 이용 증가는 확인되나 이를 공연·전시 신규 관람 증가로 해석할 자료는 없다. 2026년 발급률의 분모는 예산상 대상 28만 명이며, 19·20세 전체의 수혜율은 아니다.⁴⁹⁾

[표 3] 연도별 발급·이용·집행 실적⁵⁰⁾

구분	발급률	예산 대비 이용률	국비 집행률	비고
2024년	79.8%	34.3%	24.9%	계획액 170억 원 중 95억 1,000만 원 이월
2025년	74.2%	51.2%	40% 미만	사용액 117억 4,101만 원
2026년	94.8% / 94.7%	미공개	미공개	발급자 이용률 93.8%, 상반기 발급 26만 5,000여 명

※ 예산 대비 이용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안내 기준이다. 국비 집행률은 운영석 의원실 자료(2024년)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발언 기준으로, 분모·집계 기간이 달라 이용률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2026년 발급률은 국회 답변 94.8%와 문체부 9월 15일 설명자료의 '상반기' 94.7%가 불일치한다. 두 수치의 산식·집계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 국회 문체위 2년 연속 제도 개선 요구, 여야 의원 모두 지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두 해 연속 이 사업의 결산 심사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⁵¹⁾ 2026년 8월 3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석전문위원은 집행률이 40%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발언에서 영화가 전체 이용금액의 41.2%를 차지한다는 현황도 언급했으나, 영화가 2026년에야 사용처에 들어왔고 그 수치의 집계 기간은 회의록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41.2%를 2025회계연도 실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여야 의원실의 지적도 이어졌다. 2024년 9월 이기헌 의원실은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11%이고 예스24에서 예매할 수 있던 공연·전시 901건 가운데 694건(77%)이 서울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⁵²⁾ 조계원 의원실은 7월 말 기준 이용률이 14.3%라며 영화와 대중음악 콘서트가 빠진 사용처를 문제 삼았다.⁵³⁾ 2025년 3월 박수현 의원실은 2024년 예산 소진율이 31%에

46) 아시아경제, 「[단독]청년 외면한 '청년문화예술패스'...작년 예산 3분의 1도 못써」, 2025.3.5.

47) 아시아경제, 「예산 있으나 나마...'청년문화예술패스' 2년째 반쪽 집행」, 2026.1.19.

48) 앞의 각주 16의 자료 참조.

49) 앞의 각주 26의 자료 참조.

50) 앞의 각주 9, 16, 17, 19, 23, 40, 47의 자료 참조.

5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25.8.20.

52) 영남일보,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 저조...올들어 대구 63.6%·경북 58.9%」, 2024.9.11.

그쳤다고, 같은 해 8월 조계원 의원실은 상반기 지급 대상의 22.6%가 한 번도 쓰지 않아 지원금이 회수됐다고 밝혔다.⁵⁴⁾ 2026년에는 박수현 의원실이 2년째 절반 집행을, 조은희 의원실이 흥행작 쏘림을, 윤영석 의원실이 국회 지적 사업의 기금 이관을 지적했다.

□ 2025년 예산 대비 이용률 서울 61.7%, 제주 30.1%

지역 간 차이도 컸다. 2025년 발급률은 서울이 86.0%로 가장 높고 제주가 50.7%로 가장 낮았으며, 예산 대비 이용률(투데이신문 표기는 집행률)도 서울 61.7%, 제주 30.1%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조계원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서도 2025년 상반기 지급 대상 16만 명 가운데 사용 이력이 없어 지원금이 회수된 인원은 3만 6,339명(22.6%)이었고 전남 31.6%, 광주 25.7%, 전북 25.4%로 호남이 높았으며, 이용률은 서울 50.0%, 인천 42.2%, 경기 38.2% 순으로 수도권이 높았다. 울산에서는 2025년 상반기 발급자 2,682명 가운데 909명(34%)이 지원금을 쓰지 않고 반납했고, 지역 공연장에서 열린 뮤지컬의 티켓 3,760매 가운데 패스를 쓴 표는 24매였다.⁵⁵⁾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이용률 격차, 읍 단위에 공연장이 없는 지역 여건, 사용처가 예스24와 NOL티켓 두 곳뿐인 접근성 문제가 지적됐다. 2026년 협력판매처는 9곳으로 늘었고, 문체부는 지역의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633개에서 1,186개로 늘렸다고 답했다.

2027년 정부안도 비수도권 청년에게 5만 원을 더 준다. 지역의 이용이 적은 원인이 지원 금액보다 공연·전시 공급 부족에 있다면 지역 차등 지급만으로는 지역 문화 수요가 늘기 어렵다.

이용을 늘리려면 지원액뿐 아니라 공연 선택지, 예매 가능 시간, 지역 공급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근거는 의원실 자료에서 확인된다. 2024년 8월 말 기준 예스24에서 예매할 수 있던 공연·전시 901건 가운데 서울이 694건(77%)이었고 대구는 11건, 경북은 7건이었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원금만으로는 지역 청년이 문화를 누리기 어렵다며 공연장·전시관 확충과 순회공연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발급자·이용자와 2005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네 차례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서도 ‘보고 싶은 공연·전시가 없음’, ‘시간적 여유가 없음’, ‘거주 지역에 관람 가능한 공연·전시가 없음’이 공통으로 나타났다.⁵⁶⁾ 문체부는 청년이 내 지역에서 일상처럼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영화 등으로 이용처를 넓혔다고 설명했지만,⁵⁷⁾ 영화 이용 확대와 공연·전시 신규 관람 확대는 다른 성과지표로 추적해야 한다.

53) 연합뉴스,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률 14%...영화·콘서트 사용 불가 탓"」, 2024.9.18.

54) 연합뉴스, 「문화예술패스 한번도 안 쓴 청년 23%..."공연·전시 수도권 편중"」, 2025.8.14.

55) 울산매일, 「"쓸 곳 없다"...울산 청년 34% "청년문화예술패스 '패스'"」, 2025.7.7.

5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문화예술패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024.6~2025.2, 4회), 국회 제출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7., 241쪽 재인용.)

57) 앞의 각주 8의 자료 참조.

3. 공연·영화 시장 구조

□ 공연 판매액의 85.5%가 대중음악·뮤지컬, 82.7%가 수도권

지원금이 쓰이는 시장 자체도 일부 장르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기준 2025년 공연 티켓 판매액은 1조 7,326억 원이었다.⁵⁸⁾ 장르별로는 대중음악 9,817억 원, 뮤지컬 4,989억 원으로 두 장르가 85.5%를 차지했고, 연극·클래식·무용·국악 4개 장르를 합친 판매액은 1,933억 원(11.2%)이었다(원자료로 산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비중은 공연 건수 기준 63.1%, 티켓 판매액 기준 82.7%였다.

영화 시장에서는 흥행작 집중이 두드러졌다. 2026년 상반기 전체 영화 매출액 5,790억 원 가운데 흥행 1위 ‘왕과 사는 남자’의 매출액이 1,631억 원으로 약 28.2%였다(원자료로 산출).⁵⁹⁾ 문체부는 3월 초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로 가장 많이 본 영화로 이 작품을 들었다. 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 분야별 관람률은 영화 50.6%, 대중음악 및 연예 15%, 미술 7.7%, 뮤지컬 5.8% 순이었다.⁶⁰⁾ 이용 실적과 시장 구조를 함께 보면, 사용처 제한이 약한 보편 지원금은 이미 수요가 큰 흥행 장르와 수도권 공급자에게 쓰일 가능성이 크다.

[표 4] 공연·영화 시장 집중도 지표⁶¹⁾

구분	지표	수치
공연 (2025년)	대중음악·뮤지컬 판매액 비중	85.5%
	연극·클래식·무용·국악 판매액 비중	11.2%
	수도권 비중(티켓 판매액 / 공연 건수)	82.7% / 63.1%
영화 (2026년 상반기)	흥행 1위 작품 매출액 비중	28.2%
관람률 (2025년)	영화 / 뮤지컬 관람률	50.6% / 5.8%

※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영화진흥위원회,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장르별 비중과 흥행 1위 작품 비중은 원자료의 판매액·매출액으로 산출. 대중음악은 대중예술 가운데 대중음악 장르만 포함

58)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 2026.3.

59) 영화진흥위원회, 「2026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2026.7.29.

60)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능동적으로 누린 2025년 문화여가 활동」(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5.12.26.

61) 앞의 각주 58~60의 자료 참조.

III. 유럽 청년 문화바우처 재편 사례

1. 주요국 제도 변화

□ 프랑스 감액, 독일 종료, 이탈리아 선별 후 재개편, 스페인 용도별 한도

프랑스의 pass Culture는 18세에게 300유로를 지급했다.⁶²⁾ 프랑스 감사원(Cour des comptes)은 2024년 12월 첫 평가에서 개인 지원 예산이 2021년 9,200만 유로에서 2024년 2억 4,400만 유로(전망)로 늘었고, 도서관 분기별 지출액의 42~55%를 차지하며, 음악 외 공연을 앱으로 한 번이라도 예약한 청년은 평균 7%라고 밝혔다. 18세 가입률이 82~84%에 이른 점은 '실질적 성공'으로 보았으나 서민층 청년의 활성화율은 6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⁶³⁾ 감사원은 효과가 기존 문화 활동을 강화하는 쪽에 가깝고 이미 문화 활동을 하던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횡재 효과(effet d'aubaine)' 위험이 있으며, 지원금이 소진·만료된 뒤 새로 접한 활동을 이어 가는 이용자는 38%라고 지적했다. 18세 지원액 감액과 소득·지역 기준 선별은 검토 가능한 절감 방안으로 제시했고, 문화부가 이용 전후 문화 활동 변화를 평가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이유로⁶⁴⁾ 2025년 3월부터 18세 지원액을 150유로로 줄이고 17세는 50유로로 하며 15·16세 개인 지원을 없앴고, 장애 수당 수급 청년과 저소득 가구 청년에게는 50유로를 더 준다. 2026년에는 온라인 상품 사용 한도를 100유로에서 50유로로 낮췄고,⁶⁵⁾ 2026년 정부안의 개인 지원 예산은 1억 2,750만 유로다.⁶⁶⁾

독일은 2023년 18세가 되는 청년(2005년생)에게 200유로의 KulturPass를 지급했고, 2024년 대상인 2006년생에게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100유로로 줄였다.^{67)·68)} 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에 따르면 2023년 예산 1억 유로 가운데 약 5,000만 유로가 집행됐다. 지원금을 활성화한 비율은 2024년 말 기준 2005년생 38%, 2006년생 28%였다. 2024년 예약 건수의 47.5%는 도서였다(원자료로 산출).⁶⁹⁾ 연방감사원은 문화 재정은 주(州) 소관이라 연방에 재정 지원 권한이 없다며 지원 종료를 권고했고, KulturPass는 연정 협약에 따른 재검토를 거쳐 2025년 말 종료됐다.⁷⁰⁾

62) Service-Public.fr, "Pass Culture : quels changements concernant la part individuelle ?", 2025.3.6.

63) Cour des comptes, "Premier bilan du pass Culture"(Synthèse du rapport public thématique), 2024.12.17.

64) Assemblée nationale, Question écrite n° 10050, réponse du ministère de la Culture, 2026.2.10.

65) Service-Public.fr, "Pass Culture : quels changements en 2026 ?", 2026.1.22.

66) Sénat, Rapport général n° 139(2025-2026), tome III, annexe 7 « Culture », 2025.11.24.

67) Bundesrechnungshof, "Information über die Entwicklung des Einzelplans 04(Bundeskanzler und Bundeskanzleramt) für die Beratungen zum Bundeshaushalt 2026", 2025.9.12.

68) Die Bundesregierung, "KulturPass für 18-Jährige auch 2024", 2024.1.29.

69)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21/848(Schriftliche Fragen mit den in der Woche vom 7. Juli 2025 eingegangenen Antworten der Bundesregierung), 2025.7.11.

70) 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BKM), "KulturPass", 2026.3.13.

이탈리아는 18세 대상 지원(18app)을 2024년부터 두 카드로 나뉘었다. ISEE(가구 경제상황 지표) 3만 5,000유로 이하 가구의 18세에게 주는 문화카드와 고교 졸업시험 100점 취득자에게 주는 성적카드로, 각각 500유로를 주고 두 카드를 함께 받을 수 있다.^{71)·72)} 두 카드의 법정 지출 상한은 연 1억 9,000만 유로다. 2024년 문화카드는 21만 2,712장이 발급됐고 구매 건수의 53.2%가 종이책이었다(원자료로 산출).⁷³⁾ 이탈리아는 2027년부터 두 카드를 'Carta valore'라는 새 카드로 대체하되, 예산은 현행 편성액과 같은 연 1억 8,000만 유로(법정 상한과는 별개)로 둔다.^{74)·75)}

스페인에서는 2022년부터 18세 청년에게 400유로의 Bono Cultural Joven을 지급하며 보편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76)·77)} 400유로 가운데 현장 예술·문화유산·시청각에 최대 200유로, 실물 문화상품과 디지털 상품에 각각 최대 100유로를 쓰게 하는 용도별 한도는 2023년 왕령과 같고,⁷⁸⁾ 2026년 5월 새 왕령은 이를 유지하면서 강좌·악기·창작 재료를 한 범주로 묶어 최대 400유로까지 쓰는 방식을 더했다. 수혜자는 2022년 27만 7,607명에서 2025년 36만 3,054명으로 늘었고, 2026년 예산은 1억 7,000만 유로다. 첫 회차인 2022년에는 지출의 58.8%가 현장 예술 분야에 쓰였으나,⁷⁹⁾ 이 분야는 영화·박물관·문화유산 입장권을 함께 묶은 범주여서 공연만의 비중은 아니다.

[표 5] 유럽 주요국 청년 문화바우처 비교⁸⁰⁾

국가(제도)	대상·금액	최근 변화	평가·근거
프랑스 (pass Culture)	18세 300유로	2025년 18세 150·17세 50유로, 15·16세 개인 지원 폐지, 저소득·장애 청년 50유로 추가. 2026년 온라인 한도 50유로	감사원(2024.12): 도서가 지출액의 42~55%, 음악 외 공연 예약 7%, 횡재 효과 위험, 평가 수단 부재
독일 (KulturPass)	18세 200유로 (2023년)	2024년 100유로로 축소, 2025년 말 종료	연방감사원(2025.9): 연방 재정 지원 권한 없음, 종료 권고. 활성화율 38%·28%

71) Gazzetta Ufficiale, Decreto 29 dicembre 2023, n. 225(Carta della cultura Giovani e Carta del merito), 2024.1.16.

72) Camera dei deputati, Dossier n. 419, D.L. 201/2024(A.C. 2183), 2025.1.7.

73) Ministero della Cultura, "Piano di Analisi e Valutazione della Spesa 2025-2027"(작성일 미표기).

74) Camera dei deputati, Servizio Studi, "Legge di bilancio 2026 - Profili di interesse della VII Commissione Cultura"(A.C. 2750), 2025.12.23.

75) Senato della Repubblica-Camera dei deputati, "Legge di bilancio 2026 - A.S. 1689 - Quadro di sintesi degli interventi", 2025.12.1.

76) Boletín Oficial del Estado, Real Decreto 401/2026, de 20 de mayo(BOE-A-2026-10885), 2026.5.21.

77) La Moncloa(스페인 총리실), Bono Cultural Joven 2026 보도자료, 2026.9.21.

78) Boletín Oficial del Estado, Real Decreto 191/2023, de 21 de marzo,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normas reguladoras del Bono Cultural Joven(BOE núm. 69, 2023.3.22, RD 401/2026으로 폐지).

79) La Moncloa(스페인 총리실), Bono Cultural Joven 2022년 회차 이용 결과 보도자료, 2023.6.19.

80) 앞의 각주 62, 63, 65, 67, 68, 70~79의 자료 참조.

국가(제도)	대상·금액	최근 변화	평가·근거
이탈리아 (18app 후속)	문화카드(ISEE 3만 5,000유로 이하)·성적카드 각 500유로	2024년 선별 지원 전환, 2027년 'Carta valore'로 대체(연 1억 8,000만 유로)	2024년 문화카드 21만 2,712장, 구매 건수의 53.2%가 종이책
스페인 (Bono Cultural Joven)	18세 400유로	2026년 왕령으로 재정비, 용도별 한도(현장 200·실물 100·디지털 100유로) 유지, 묶음 400유로 방식 신설	2022년 지출의 58.8%가 현장 예술 분야. 2026년 예산 1억 7,000만 유로

※ 비중의 기준(지출액·예약 건수·구매 건수)과 분야 분류가 나라마다 달라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움.
독일 도서 비중과 이탈리아 종이책 비중은 원자료로 산출

2. 시사점

□ 보편 지급 효과 검증 부족 및 용도 설계 필요

네 나라의 경험은 세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청년 문화바우처는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도서 등 익숙한 분야에 집중됐다. 프랑스에서는 도서가 분기별 지출액의 42~55%, 독일에서는 2024년 예약 건수의 47.5%를 차지했고, 소득 기준 선별 카드인 이탈리아 문화카드에서도 종이책이 구매 건수의 53.2%였다. 한국에서는 2026년 상반기 이용 건수의 80%가 영화였다.

둘째,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보편 바우처는 조정 대상이 됐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 여건 속 지속가능성을 개편 이유로 들었고, 독일은 같은 이유로 2024년 지원액을 절반으로 줄였다. 셋째, 보편 지원을 유지한 스페인은 용도별 한도를 두었고, 첫 회차 지출의 58.8%가 현장 예술 분야에 쓰였다. 이탈리아는 선별 카드를 2024년부터 운영한 뒤 2027년에 같은 지출 규모로 제도를 다시 바꾼다.

한국의 2027년 정부안은 소득 기준 없이 19~34세 모든 청년에게 매년 지급하고,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만 다르다. 대상과 지급 횟수를 함께 늘리는 방향은 프랑스·독일의 조정과 반대이고, 스페인과 달리 현행 영화 횟수 제한·도서 한도 외의 용도별 설계는 정부안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프랑스 감사원이 지적한 성과 평가 수단의 부재도 점점 과제다.

Ⅳ. 빅데이터 분석

1. 분석 자료

본 보고서는 확대안에 대한 관심과 반응을 네 가지 자료로 분석했다.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로 2024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검색량과 이용 분야별 검색량을 살폈고,⁸¹⁾ 썸트렌드 클라우드로 수집한 네이버·다음 뉴스 댓글 5,350건 가운데 패스 관련 댓글 870건을 판독했다.⁸²⁾ 온라인 문서 8,877건의 언급량·감성어·연관어⁸³⁾와 커뮤니티 댓글 178건⁸⁴⁾은 보조 자료로 썼다.

[표 6] 빅데이터 분석 자료⁸⁵⁾

자료	출처	기간	규모	분석 내용
검색량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	2024.1~2026.9 (월·일 단위)	명칭 검색어 9개, 이용 분야 검색어 26개	관심 시점, 이용 분야별 검색
뉴스 댓글	썸트렌드 클라우드 (네이버·다음 뉴스 댓글)	기사 2026.8.1~9.23	기사 535건, 댓글 5,350건 중 판독 870건	긍·중·부, 쟁점 어휘
온라인 문서 (보조)	썸트렌드 클라우드 (10개 채널)	2026.8.1~9.22	8,877건	언급량, 감성어, 연관어
커뮤니티 댓글 (보조)	에phem코리아· 엠엘비파크·더쿠	2026.8.1~9.23	178건 (유효 판정 109건)	게시판 유형별 반응

※ 검색량은 상대지수이며 연령·성별 조건 없이 조회. 뉴스 댓글의 기사 수는 네이버 뉴스 245건, 다음 뉴스 290건

2. 검색량 추이

□ 검색량 정점은 신청·발급 시점, 정책 발표일은 추가 발급일의 5.7~39.2%

청년문화예술패스 검색량은 신청과 발급 시기에 크게 늘었다. 월별 검색량은 2026년 정식 사업 발급이 시작된 2월이 가장 많았고(지수 100), 하반기 추가 발급이 있었던 8월이 45.3이었다. 정부·문체부 예산안이 발표된 9월(1~23일)은 20.2였다. 일별로는 추가 발급이 시작된 8월 10일이 가장 많았고(100), 8월 31일(64.6), 8월 11일(50.2) 순이었다. 정부가 확대 방침을 처음 공식 발표한 8월 28일⁸⁶⁾은 5.7,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9월 1일은 39.2, 문체부가 예산안을 발표한 9월 4일은 11.9였다. 7월 말에도 검색이 늘었는데, 6월 30일까지

81)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월·일 단위 검색량 상대지수), 2026.9.24.

82) 썸트렌드 클라우드(Sometrend Cloud) 네이버·다음 뉴스 댓글 자료(‘청년문화패스’·‘청년문화예술패스’ 언급 기사 2026.8.1.~9.23.), 2026.9.24.

83) 썸트렌드 클라우드(Sometrend Cloud) 간편 분석(언급량·연관어·감성) 결과, 2026.9.23.

84) 에phem코리아·엠엘비파크·더쿠 게시글·댓글 원문(게시일 2026.8.1.~9.23.), 2026.9.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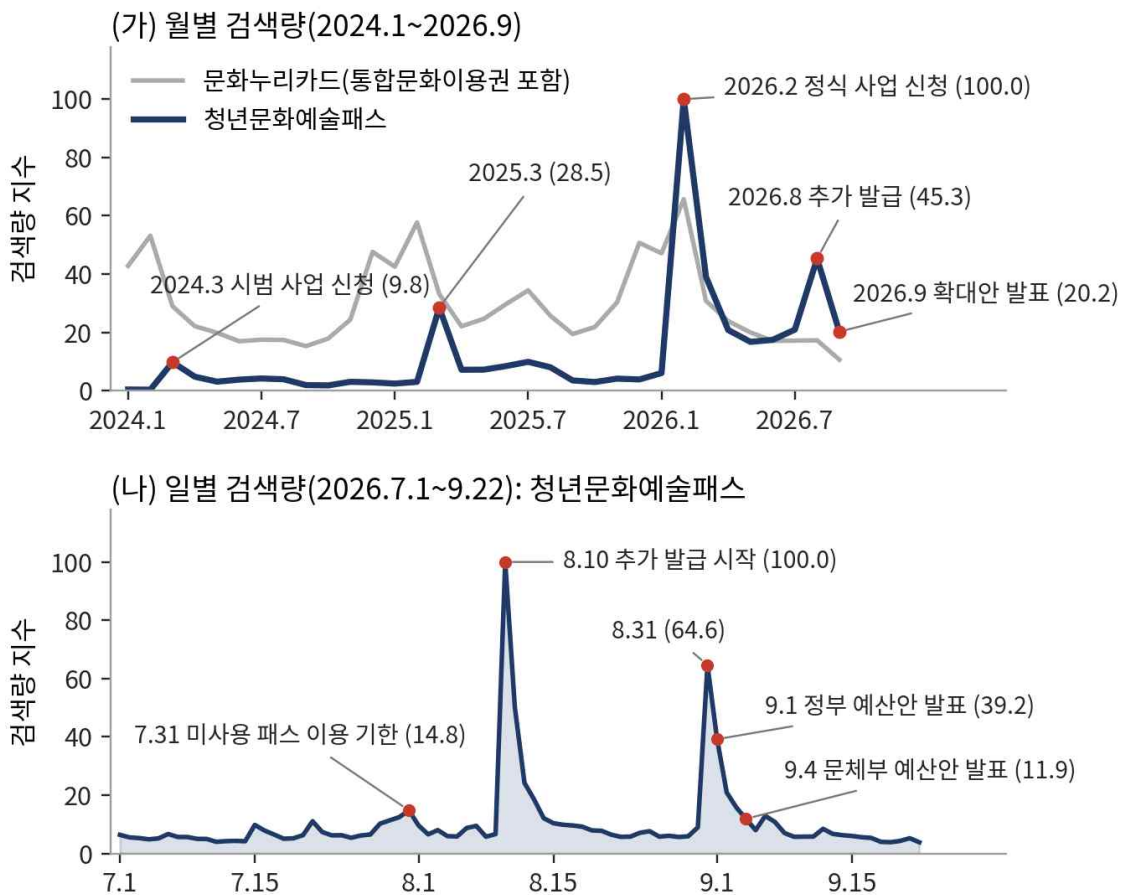
85) 앞의 각주 81~84의 자료 참조.

86) 앞의 각주 33의 자료 참조.

발급받은 패스를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쓰지 않으면 8월부터 쓸 수 없게 한 규정과 시기가 겹친다.⁸⁷⁾

2026년 2월 청년문화예술패스 검색량(100)은 같은 달 문화누리카드 검색량(65.7)보다 많았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이 27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⁸⁸⁾ 28만 명 대상 사업의 검색량으로는 큰 편이다. 반면 새 명칭 ‘청년문화패스’의 9월 검색량은 2.6으로 확대안 발표 뒤에도 크게 늘지 않았다. 검색량 정점은 신청·발급 같은 이용 절차 시점이었다. 확대안 관련 발표일의 검색량은 이보다 적었고, 8월 31일의 증가는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림 3] 청년문화예술패스 검색량 추이



※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 상대지수(조회 기간 최댓값=100).

(가)는 청년문화예술패스·청년문화패스·서울청년문화패스·문화누리카드를 함께 조회해 청년문화예술패스 2026년 2월을 100으로, (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8.10을 100으로 둬.

청년문화예술패스 그룹은 청년문화예술패스·청년 문화예술패스·문화예술패스,

청년문화패스 그룹은 청년문화패스·청년 문화패스,

서울청년문화패스 그룹은 서울청년문화패스·서울 청년문화패스,

문화누리카드 그룹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가)는 2026.9.23, (나)는 9.22까지

87) 앞의 각주 8의 자료 참조.

88) 문화체육관광부, 「올해 문화누리카드 15만 원 지원...청소년 등엔 1만 원 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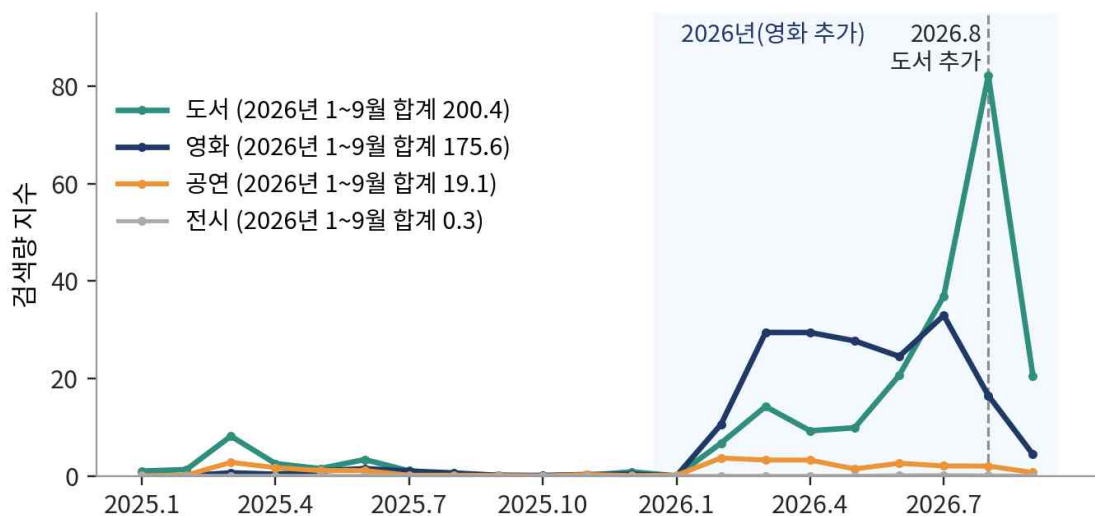
3. 이용 분야별 검색량

□ 2026년 도서·영화 검색이 공연의 약 10배, 전시 검색 미미

패스 명칭과 이용 분야를 함께 검색한 양을 보면, 2026년 1~9월 합계 지수는 도서 200.4, 영화 175.6, 공연 19.1, 전시 0.3이었다. 공연 검색은 영화의 약 11% 수준이었다. 영화 검색은 영화가 사용처에 들어간 2026년 2월부터 늘어 3~7월 24.5~33.0을 유지했고, 도서 검색은 도서 구매가 가능해진 8월 82.2로 가장 많았다. 2025년에는 네 분야 모두 검색량이 적었다.

검색량은 정보 탐색의 크기를 나타낼 뿐 실제 이용과 같지 않다. 다만 검색은 영화·도서에, 2026년 상반기 이용은 영화에 몰렸고(Ⅱ장 1절), 유럽에서도 도서가 지출액·예약·구매 건수의 절반 안팎을 차지했다(Ⅲ장). 지원금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이미 수요가 큰 분야로 향한다는 점은 여러 자료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림 4] 이용 분야별 검색량 추이(월별)



※ 검색어 그룹(패스 명칭+분야): 영화 6개(영화·영화예매·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 공연 6개(공연·뮤지컬·콘서트·연극 등), 전시 3개, 도서 6개(도서·책·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등). 사용처·사용법 그룹(5개)과 함께 조회해 최댓값(사용처·사용법 2026.3)=100. 집계 기준 미만인 달은 0

4. 뉴스 댓글 분석

□ 뉴스 댓글 870건 중 부정 95.2%, 네이버 공감 수 가중 시 96.9%

본 보고서는 썬트렌드 클라우드로 2026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청년문화패스’ 또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언급한 네이버 뉴스 245건, 다음 뉴스 290건의 댓글을 모두 수집했다. 댓글이 달린 기사는 161건, 댓글은 5,350건이었다. 이 가운데 패스를 중심으로 다룬 기사 32건의 댓글 873건 전부와, 출산·청년 지원 등 다른 주제의 기사에서 문화·패스

관련 어휘가 들어간 댓글 67건을 골라 판독했다. 패스와 관계없는 70건을 뺀 870건(네이버 800건, 다음 70건)이 판독 대상이다.

판독 결과 부정이 828건(95.2%), 중립이 20건(2.3%), 긍정이 22건(2.5%)이었다. 네이버는 부정 94.9%, 다음은 98.6%였다. 네이버 댓글의 공감 3,539회 가운데 96.9%가 부정 댓글에 몰렸다. 공감 수 상위 댓글은 “진짜 돈 뿌리는데 제대로 재미 들렸네…”(공감 404회), “뿌리는 돈 9.6조원? 저 돈으로 청년들 일자리 더 만들고…”(233회)처럼 지출 자체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긍정 댓글 22건에는 “너무 좋다 매년 뮤지컬 보는게 부담이었는데”처럼 혜택을 반기는 반응과 함께, 비판 댓글을 겨냥한 정당·세대 간 반박이 섞여 있었다. 긍정 22건 가운데 7건은 지역 선착순 폐지를 다룬 데일리안 기사(9월 2일)에 달렸다.

[표 7] 포털별 뉴스 댓글 판독 결과

포털	선별 댓글	판독 대상	부정	중립	긍정
네이버	865건	800건	759건(94.9%)	19건(2.4%)	22건(2.8%)
다음	75건	70건	69건(98.6%)	1건(1.4%)	0건(0.0%)
합계	940건	870건	828건(95.2%)	20건(2.3%)	22건(2.5%)
공감 수 가중 (네이버)	-	공감 3,539회	96.9%	2.7%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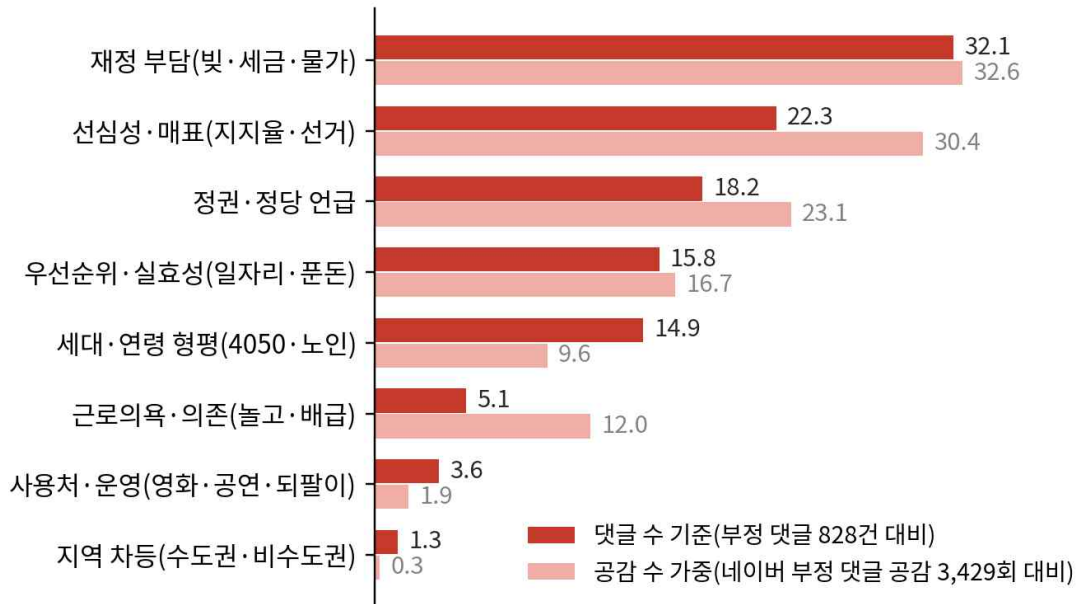
※ 선별 댓글은 패스 중심 기사 32건의 댓글 전부와 그 밖의 기사에서 문화·패스 관련 어휘가 있는 댓글. 판독 대상은 선별 댓글에서 패스와 무관한 댓글을 뺀 것이며, 비율은 판독 대상 대비. 다음 댓글은 공감 수가 제공되지 않음

□ 부정 댓글 쟁점은 재정 부담 32.1%, 선심성·매표 22.3% 순

부정 댓글에 어떤 쟁점 어휘가 쓰였는지 사전을 적용해 집계했다(중복 포함). ‘빚·세금·물가’ 등 재정 부담 어휘가 32.1%로 가장 많았고, ‘지지율·선거·매표’ 등 선심성·매표 어휘 22.3%, 정권·정당 언급 18.2%, ‘일자리·푼돈’ 등 우선순위·실효성 어휘 15.8%, ‘4050·노인·나이’ 등 세대·연령 형평 어휘 14.9% 순이었다. 공감 수로 가중하면 선심성·매표(30.4%)와 근로 의욕·의존(12.0%)의 비중이 커졌고 세대·연령 형평(9.6%)은 작아졌다. 사용처·운영(3.6%)과 지역 차등(1.3%)처럼 제도 설계를 다룬 댓글은 적었다. 뉴스 댓글의 논쟁은 지원금을 어떻게 설계할지보다 지원 자체의 정당성에 모여 있었다.

일부 댓글은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공감 88회를 받은 댓글은 문화비 지원 뒤 콘서트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 감시해 달라고 요구했고, “전통문화예술, 순수예술 등 대중의 관심이 적은 곳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네요”라는 댓글도 있었다. 수혜 연령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20살이고 받아서 좋긴 한데 나라에 돈이 남아도는 상황도 아니고…”라고 쓴 댓글, “...우리집 애들보니 그돈 없어서 문화생활 못하는건 아니더라”라는 댓글도 있었다. 판독 대상 밖으로 넓혀 수집한 댓글 5,350건 전체에 같은 쟁점 사전을 적용하면 재정 부담 어휘가 들어간 댓글은 29.1%, 사용처·운영 어휘가 들어간 댓글은 1.4%였다.

[그림 5] 부정 댓글 쟁점 어휘 포함 비율



※ 부정 댓글 828건 대비, 해당 쟁점 어휘가 하나 이상 들어간 댓글의 비율(%). 한 댓글에 여러 쟁점이 있으면 중복 집계. 공감 수 가중은 네이버 부정 댓글의 공감 수 합계(3,429회) 대비

5. 온라인 문서 분석

□ 확대 발표 후 뉴스 연관어가 이용 안내에서 예산·재정으로 이동

썸트렌드로 8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패스를 언급한 온라인 문서 8,877건을 분석한 결과, 블로그·티스토리 글이 76.0%를 차지했다. 언급량은 문체부 예산안 발표일인 9월 4일(829건)에 가장 많았다. 뉴스의 긍정 감성어 비중은 1기(8월 1~27일) 46.8%에서 2기(8월 28일~9월 10일) 31.8%, 3기(9월 11~22일) 27.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뉴스의 부정 감성어 비중은 6.9%에서 10.8%로 조금 높아졌고, 줄어든 긍정 비중은 주로 중립(46.4%에서 61.5%)으로 옮겨 갔다. 전체 채널의 감성어 비중은 긍정 39.9%, 중립 45.9%, 부정 14.3%였다. 1기 뉴스 연관어는 ‘향유’, ‘발급’, ‘누리집’ 등 이용 안내가 중심이었으나, 확대안이 나온 2기에는 ‘정부’, ‘예산’, ‘예산안’, ‘규모’, ‘재정’이 새로 상위권에 들었다. ‘미래대응기금’, ‘국가부채’, ‘혈세’ 등 재원 관련 단어가 함께 나온 뉴스는 197건(15.2%), ‘흥행작’, ‘쏟림’, ‘기초예술’, ‘실효성’ 등 실효성 관련 단어가 함께 나온 뉴스는 191건(14.7%)이었다.

6. 커뮤니티 댓글 분석(보조 자료)

□ 시사·경제 게시판 부정 84.4%, 취미·팬덤 게시판 긍정 62.5%

에phem코리아·엠엘비파크·더쿠의 관련 게시글 21건에 달린 댓글 178건 가운데 긍정 또는 부정이 드러난 109건은 부정 56.9%, 긍정 43.1%였다. 주식, 유머/이슈, 자유게시판 등 시사·경제 게시판 댓글 45건은 부정이 84.4%였고, 만화·힙합·인터넷 방송·아이돌·영화 등 취미·팬덤 게시판 댓글 64건은 긍정이 62.5%였다. 긍정 댓글은 “헐 개좋다 드디어 나도” (더쿠)처럼 혜택을 반기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부정 댓글은 연령 기준에 대한 불만과 선심성 지출 비판이 많았다. 표본이 작아 본 보고서는 이 자료를 뉴스 댓글 분석의 보조 자료로만 쓴다.

[표 8] 커뮤니티별 댓글 긍·부정 분포

커뮤니티	전체 댓글	유효 판정	부정	긍정
에phem코리아	114건	48건	33건(68.8%)	15건(31.3%)
엠엘비파크	15건	14건	12건(85.7%)	2건(14.3%)
더쿠	49건	47건	17건(36.2%)	30건(63.8%)
합계	178건	109건	62건(56.9%)	47건(43.1%)

※ 전체 댓글은 관련 게시글(에phem코리아 15건, 엠엘비파크 2건, 더쿠 4건)의 판독 대상 댓글. 유효 판정은 긍정 또는 부정으로 판정된 댓글이며, 중립·판정 불가 69건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 커뮤니티 댓글은 긍·부정을 먼저 판단하고, 태도를 읽을 수 없는 경우만 중립·판정 불가로 분류

7. 소결

패스 관련 검색량은 신청·발급·사용 기한 같은 이용 절차 시점에 많았고, 이용 분야 검색은 영화·도서예 몰렸다. 공연·전시예 대한 검색은 적었다. 뉴스 댓글은 95.2%가 부정이었으며, 부정 댓글에서는 재정 부담(32.1%)과 선심성·매표(22.3%) 어휘가 가장 많았다. 제도 설계예 대한 의견은 적었다. 커뮤니티에서는 취미·팬덤 게시판의 환영과 시사·경제 게시판의 비판이 엇갈렸다. 뉴스 댓글 작성자가 여론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확대안이 넓은 동의를 얻으려면 재정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문화 향유 효과예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V. 정책 대안

본 보고서는 II~IV장의 자료와 여야 의원실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조건을 붙여 심사할 일곱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제안의 금액 배분과 확대 순서는 정책 선택지이며, 해당 설계가 효과를 낸다는 검증 결과로 제시하지 않는다.

1. 수혜율 가정 검증 및 단계적 확대

□ 적격 인원과 지역별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률별 소요를 따로 계산

정부안은 수혜율 70%를 가정했으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비 소요를 추계하려면 적격 인원, 수도권·비수도권 분포, 연령별 신청률, 발급 후 사용·환수율, 운영비를 따로 제시해야 한다. 보도된 919만 명은 정부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국가데이터처의 2027년 19~34세 장래인구추계 985만 4,000명은 정책상 적격 인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확인되지 않았다. 7,925억 원을 70%와 919만 명으로 나눠 만든 평균액을 다시 50~90%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예산안 자체를 재표현하는 순환 계산이 된다. 표 9는 적격자 100만 명을 기준으로 신청률과 정부안의 1인당 지원액만 바꾼 예시다.

[표 9] 적격자 100만 명당 지원액별 국비 소요 예시

신청률	50%	60%	70%	80%	90%
1인당 10만 원	500억 원	600억 원	700억 원	800억 원	900억 원
1인당 15만 원	750억 원	900억 원	1,050억 원	1,200억 원	1,350억 원

※ 적격자 100만 명에게 신청률별로 수도권 10만 원 또는 비수도권 15만 원을 모두 지급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 실제 전국 소요는 공식 적격자 수와 지역별 비중, 이용·환수 및 운영비에 따라 달라진다. 이 표는 2027년 총예산 추계나 정부안 7,925억 원의 적정성 판정이 아니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는 수혜율 70%의 근거와 적격 인원 산정 방식, 연령·지역별 신청 전망 및 수요 초과 시 보충 재원 절차를 먼저 제출받아야 한다. 2026년은 영화·도서가 순차적으로 사용처에 들어간 첫해라 2027년 모든 연령의 이용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다. 연령 구간이나 지역을 나눠 순차 도입하거나 지급 횟수를 제한한 시범 운영을 검토하되, 미지원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상 선정 원칙과 확대 일정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이후 실제 신청·사용·환수율과 신규 관람 성과를 확인해 다음 단계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2. 공연·전시 전용 금액 지정 및 지역 공급 연계

□ 지원액 일부를 공연·전시 전용으로 지정, 영화·도서 사용 한도 설정

흥행작 쓸림을 줄이려면 지원액의 용도를 설계하되, 청년의 선택권과 지역별 공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스페인은 기본 방식에서 400유로 중 현장 예술 등에 최대 200유로, 실물·디지털 상품에 각각 최대 100유로를 쓰게 하고, 프랑스는 2026년 온라인 상품 사용 한도를 50유로로 낮췄다. 한국의 2026년 패스도 영화 이용 횟수를 수도권 2회, 비수도권 4회로 제한하고, 도서 이용 한도를 9월 1일부터 수도권 3만 원에서 5만 원, 비수도권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다.⁸⁹⁾ 2027년 확대안에서는 연극·클래식·무용·국악·전시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배정하는 안과 현행처럼 영화·도서 사용 한도를 두는 안을 시범 비교할 수 있다. 다만 공연·전시 공급이 적은 지역에서는 전용액이 미사용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지역 공연 편성·순회와 연계하고, 사용하지 못한 전용액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지역 공연·전시 공급 및 사용처 확충

공연 판매액의 82.7%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구조에서 비수도권에 5만 원을 더 주는 것만으로 지역 공연 관람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제 미사용 사유에 ‘지역에서 볼 공연·전시가 없다’는 응답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 문체부가 2026년 지역 프로그램을 633개에서 1,186개로 늘렸다고 국회에 답한 만큼, 2027년 추가 지원분의 성과는 지역별 프로그램 수뿐 아니라 실제 예매 가능 좌석, 이동거리, 신규 관람자, 미사용률로 확인해야 한다. 지역 공연장의 기획 공연·순회 공연·전시와 지역 예매처 확충을 함께 추진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전용액 적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저소득 청년 가산 및 문화누리카드 연계

□ 소득 수준을 반영한 가산 지원, 문화누리카드 연계 대상·금액 조정

프랑스는 장애 수당 수급 청년과 저소득 가구 청년에게 50유로를 더 주고, 이탈리아는 가구 경제상황(ISEE) 기준 카드를 운영한다. 국내에서는 문화누리카드가 2026년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으로 270만 명에게 1인당 연 15만 원을 지원한다.⁹⁰⁾ 2027년 정부안의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은 3,221억 원으로, 청년문화패스 예산(7,925억 원)의 약 41% 수준이다.

청년문화패스에 소득 기준을 두거나, 보편 지원을 유지하더라도 저소득 청년에게 가산액을 두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경우 문화누리카드를 받는 19~34세 청년의 중복 수혜와 합산 한도를 함께 정해 두 제도의 역할을 나눠야 한다.

89)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식 누리집,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 분야 이용 한도 금액 상향 안내」, 2026.9.1. 시행 공지.

90) 앞의 각주 88의 자료 참조.

4. 재원 지속성 점검 및 재평가 규정

□ 추가세수 기반 기금의 지속성 점검, 일정 기간 뒤 재평가 의무화

청년문화패스의 재원인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한다. 반면 청년문화패스는 34세까지 매년 지급하는 구조여서 한 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될 수 있다. 세수 여건이 달라져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기금 재원이 줄면 어떤 재원으로 옮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사업 근거에 3년 등 일정 기간 뒤 성과를 평가해 지속 여부를 정하는 재평가 규정을 두고, 기금운용계획을 바꿀 때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세 차례 사업 규모의 적정성과 집행 관리를 지적한 만큼, 확대에 앞서 집행 관리 계획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5. 성과지표 도입 및 이용 자료 공개

□ 신규 관람·지속 이용 지표 도입, 장르·지역별 실적 정기 공개, 부정사용 방지

공개된 성과가 발급률·이용률과 만족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년 이용자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 2,627명 중 56.7%가 패스 전액 사용 이후 추가 관람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10.8%는 생애 첫 문화예술 분야 관람, 9.1%는 새로운 분야의 취향 발견을 긍정적 부분으로 골랐다.⁹¹⁾ 다만 자기선택 응답자의 자기보고로서 지원 종료 뒤 장기 이용이나 사업이 없었을 때와 비교한 순효과를 확인한 자료는 아니다. 프랑스 감사원도 이용 전후 문화 활동 변화를 평가할 수단 부족을 지적했다. 한국도 최초 관람자 비율, 장르별 신규 이용, 지원금 소진 뒤 자비 관람, 다음 해 관람 지속률을 성과지표로 두고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사전 관람 경험·소득·지역 차이를 반영한 평가를 설계해야 한다.

평가 설계는 2027년 확대 전에 확정해야 한다. 신청자 동의를 받아 익명화한 결제·예매 이력과 기초 설문을 연결하고, 순차 도입 구간 또는 비교 가능한 비수혜 집단을 활용해 신규 관람과 자비 지출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영화·도서·공연·전시·체육의 이용금액과 이용 건수를 따로 공개하고, 작품 상위 집중도와 지역 내 결제·관람 장소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검색량과 뉴스 댓글은 정보 탐색과 일부 반응을 보여주지만 정책의 이용 효과나 국민 전체의 지지율을 측정하지 않으므로 예산 성과지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상이 늘면 신청·본인확인·중복 수혜 검증·예매처 정산·환수·민원 처리 용량과 부정사용 점검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 문체부는 2027년 확대에 맞춰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⁹²⁾ 예매처 결제 자료로 취소·재판매 등 이상 거래를 점검하고, 지원 전후 같은 작품의

91) 앞의 각주 18의 자료 참조.

92) 앞의 각주 10의 자료 참조.

가격 변화를 추적하되 장르와 좌석 등급 차이를 통제해야 한다. 국회는 시스템 처리 용량, 장애 대응,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정산 오류 환수 계획을 예산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지자체 사업과의 정합성

□ 중복 지원 기준과 기존 지방사업의 역할을 사전에 정리

서울시는 2026년 중앙정부 사업이 19세에서 19·20세로 확대되자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 연령을 20~23세에서 21~23세로 조정했고, 8월부터는 21~24세로 다시 넓혔다.⁹³⁾ 2027년 중앙정부안이 19~34세를 대상으로 하면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사업과 대상 연령이 겹친다. 이는 곧바로 중복 지급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며, 2027년의 최종 자격·합산 규칙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수혜 이력의 처리, 문화누리 카드와의 합산, 지방비 사업이 공연·전시 공급이나 저소득 가산을 맡을지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6년 1회 사용 한도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2025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사례는 단순 연간 지원액뿐 아니라 1회 결제 한도와 예매 방식이 선택 가능한 작품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사업도 장르별 한도를 정할 때 작품 가격·추가 본인부담·장애인 접근성·지방 공연 회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 조사 결과를 전국 청년에게 그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7. 국회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판단 기준

□ 예산 규모·장르 효과·지역 접근성·운영 준비를 분리해 점검

첫째, 문체부는 19~34세 적격 인원의 정의와 산정 자료, 지역·연령별 인원, 70% 신청 가정의 근거, 수요 초과 시 재원 조달 절차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2024~2026년의 발급·실사용·전액 미사용·환수 인원을 같은 분모와 기간으로 재정리하고, 장르별 이용 건수와 금액, 작품별 집중도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람 가능 프로그램·좌석·예매처 및 실제 이용 격차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넷째, 이용 전후 설문과 행정자료를 연계한 평가 설계, 비교집단, 자료 공개 일정과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확대에 필요한 중앙관제·정산 시스템의 처리 용량과 장애·부정사용 대응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이 자료가 제시되면 국회는 단일 발급률이나 만족도보다 ‘새로운 분야의 관람이 늘었는가’, ‘비수도권 청년이 실제로 선택할 공연·전시가 늘었는가’, ‘지원금 종료 뒤 자비 관람이 이어지는가’, ‘신청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지급·정산되는가’를 기준으로 단계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료가 없는 지표는 목표치를 임의로 채우지 말고 2027년 첫해의 측정 계획과 공개 시점을 예산 부대의견 등에 명확히 적을 필요가 있다.

93) 앞의 각주 43의 자료 참조.

VI. 결론

2027년 청년문화패스 확대안은 예산을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늘리고, 19·20세에게 생애 한 번 지원하던 사업을 19~34세가 매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꾸는 전환이다. 정부는 세대 내 형평성과 청년의 자립 지연을 근거로 들었고, 기존 이용자 설문에서도 높은 만족도와 전액 사용 후 추가 관람 경험이 보고됐다.

확대 규모는 대통령이 확장 방안을 기획하라고 지시한 뒤 두 달 만에 정해졌고 적격 인원 수혜율과 지원 단가를 곱한 산식과 부합하며, 추가세수 기반 기금과 청년층의 낮은 지지율이 겹친 시점에 발표됐다(1장 3절).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목표는 유효하지만, 2027년 정부안의 적격 인원·장르별 이용 전망·지역별 공급을 확인해야 예산 규모와 수단을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발급 확대와 다양한 공연·전시 경험 확대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영화 도입 전에는 예산 대비 이용률이 낮았고, 대중음악 콘서트가 사용처에 들어간 뒤 첫 연간 자료인 2025년에는 사용액의 45.2%가 콘서트에 쓰였다. 영화가 추가된 2026년 상반기에는 이용 건수의 80%가 영화였다는 보도도 있다. 서울시의 공연·전시 중심 사업에서는 연극·뮤지컬·전시 이용이 각각 34.4%·21.9%·20.9%로 발표됐다. 이 사업들은 대상과 분모가 달라 직접적인 효과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지원금의 용도·공급·예매 조건을 함께 설계하고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유럽의 경험도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프랑스는 감사원이 도서 편종과 평가 수단 부재를 지적한 이후 재정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지원액을 줄였고, 독일은 사업을 끝냈다. 이탈리아는 선별 지원으로 바꾼 데 이어 2027년 재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스페인은 용도별 한도를 둔 채 보편 지원을 유지했다. 본 보고서가 확인한 정부 발표 자료에는 대상과 지급 횟수를 늘리는 계획은 있으나, 용도별 한도나 성과 평가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패스 관련 뉴스 댓글 판독 자료에서는 95.2%가 부정으로 분류됐고 재정 부담과 선심성 비판 어휘가 많았다. 반면 취미·팬덤 게시판 표본에서는 환영도 많았다. 이 자료는 수집·선별된 일부 온라인 반응이며 국민 전체의 지지율이 아니다. 예산 심사의 핵심은 댓글의 찬반 비율보다 정책 목표에 맞는 신규 관람, 지역 접근성, 재정 지속성 및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국회는 적격 인원과 수혜율 가정, 지역별 수요, 공연·전시 전용액과 영화·도서 한도, 저소득 청년 및 지방사업과의 관계, 성과 평가와 행정시스템 준비를 각각 점검해야 한다. 지원액만 늘리는 방안,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안, 공급을 먼저 늘리는 방안의 결과를 단계적으로 비교하고 실적을 공개할 때 청년문화패스가 새로운 문화 경험을 늘리는지 판단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내 정부·국회·공공기관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내년 청년정책에 43조 투입...취업부터 주거·혼·출산 집중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8.28.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025.12.
- 국가데이터처, 「인구상황판: 청년인구(19~34세)」(장래인구추계), 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2026.9.24. 접속.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25.8.20.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26.8.31.
-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7.
- 기획예산처,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9.1.
- 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미래대응기금에는 추가세수를 통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2026.9.14.
- 문화체육관광부, 「19·20세 청년에 '문화예술패스' 발급...최대 20만 원까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2.9.
- 문화체육관광부, 「2027년 정부예산안 사전브리핑」, 녹취(기획조정실장·문화정책과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9.4.
- 문화체육관광부, 「28일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신청순 발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4.3.27.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내년 예산 첫 9조 원 돌파...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9.4.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설명자료, 「청년세대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에 확대 반영했습니다」, 2026.9.15.
- 문화체육관광부, 「올해 문화누리카드 15만 원 지원...청소년 등엔 1만 원 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2.2.
- 문화체육관광부, 「청년 문화예술패스 도입...19세 16만명에 최대 15만원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3.12.28.
- 문화체육관광부,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 63% 육박...'왕사남' 등 관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3.6.
-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하반기 추가 발급...도서 구입도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8.10.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능동적으로 누린 2025년 문화여가 활동」(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5.12.26.
- 서울특별시, 「청년 문화 선택지 넓히는 서울시...서울청년문화패스 24세까지 늘리고 사용한다 개선」, 2026.8.17.
- 영화진흥위원회, 「2026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2026.7.29.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 2026.3.
-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식 누리집,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 분야 이용 한도 금액 상향 안내」, 2026.9.1. 시행 공지.
- 청와대, 「내년에 (2027년) 만 19세~34세 주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2026.8.3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17)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 안내, 202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및 발급 시작! 2006년생 최대 15만원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2025.3.6.

2. 해외 정부·공공기관 자료

- Assemblée nationale, Question écrite n° 10050, réponse du ministère de la Culture, 2026.2.10.
- Boletín Oficial del Estado, Real Decreto 191/2023, de 21 de marzo,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normas reguladoras del Bono Cultural Joven(BOE núm. 69, 2023.3.22, RD 401/2026으로 폐지).
- Boletín Oficial del Estado, Real Decreto 401/2026, de 20 de mayo(BOE-A-2026-10885), 2026.5.21.
- Bundesrechnungshof, "Information über die Entwicklung des Einzelplans 04(Bundeskanzler und Bundeskanzleramt) für die Beratungen zum Bundeshaushalt 2026", 2025.9.12.
- Camera dei deputati, Dossier n. 419, D.L. 201/2024(A.C. 2183), 2025.1.7.
- Camera dei deputati, Servizio Studi, "Legge di bilancio 2026 - Profili di interesse della VII Commissione Cultura"(A.C. 2750), 2025.12.23.
- Cour des comptes, "Premier bilan du pass Culture"(Synthèse du rapport public thématique), 2024.12.17.
- 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BKM), "KulturPass", 2026.3.13.
-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21/848(Schriftliche Fragen mit den in der Woche vom 7. Juli 2025 eingegangenen Antworten der Bundesregierung), 2025.7.11.
- Die Bundesregierung, "KulturPass für 18-Jährige auch 2024", 2024.1.29.
- Gazzetta Ufficiale, Decreto 29 dicembre 2023, n. 225(Carta della cultura Giovani e Carta del merito), 2024.1.16.
- La Moncloa, Bono Cultural Joven 2022년 회차 이용 결과 보도자료, 2023.6.19.
- La Moncloa, Bono Cultural Joven 2026 보도자료, 2026.9.21.
- Ministero della Cultura, "Piano di Analisi e Valutazione della Spesa 2025-2027"(작성일 미표기).
- Senato della Repubblica-Camera dei deputati, "Legge di bilancio 2026 - A.S. 1689 - Quadro di sintesi degli interventi", 2025.12.1.
- Sénat, Rapport général n° 139(2025-2026), tome III, annexe 7 « Culture », 2025.11.24.
- Service-Public.fr, "Pass Culture : quels changements concernant la part individuelle ?", 2025.3.6.
- Service-Public.fr, "Pass Culture : quels changements en 2026 ?", 2026.1.22.

3. 언론 보도

- 뉴스1, 「2027년 문화기술 예산안 2406억원 편성...문화기술 생태계 기반 구축」, 2026.9.8.
- 뉴스핌, 「2024 청년문화예술패스 28일 만료...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2025.2.19.
- 뉴스핌, 「[2027 예산안] 청년·지역·콘텐츠에 초점... '국민주권정부' 맞춤 전략적 편성」, 2026.9.4.
- 뉴스핌, 「8월 내 홀드백 제도 윤곽·복합형 돔구장은 2개 지역 공모... 'K컬처' 지역으로」, 2026.8.5.
- 뉴시스, 「미래기금 이관사업 30%가 국회 지적한 '부실 사업'... 예산만 13조」, 2026.9.14.
- 뉴시스, 「이 대통령 "정책 추진 과정 충분한 의견 수렴 중요... 청년 체감 정책 다양한 목소리 경청해야"」, 2026.7.2.
- 더팩트, 「조은희 "청년문화패스, '홍행작' 세금지원' 변질... 원점 재검토해야"」, 2026.9.4.
- 머니투데이방송(MTN), 「"만족도 97%" 청년 문화예술패스, 꿀맛보는 사람들 늘었다 [엔터그알]」, 2026.3.13.
- 머니투데이, 「"청년이 진짜 취약세대"...李, 정부에 "내 아들·딸이라 여기고 정책 만들라"」, 2026.8.28.
- 머니투데이, 「李 대통령, 예술인 지원방안 보고받고 "佛 소피카 제도 연구해 보라"」, 2026.9.11.
- 문화일보, 「李 "청년세대, 기회 없어 좌절... 근본적 반성하고 점검"」, 2026.8.14.
- 부산일보, 「문체부 내년 예산안 9.6조...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강화」, 2026.9.7.
- 서울경제, 「문체부 2026년 예산 7조8555억원 확정... 국회서 593억원 증액」, 2025.12.3.
- 아시아경제, 「[단독]청년 외면한 '청년문화예술패스'...작년 예산 3분의 1도 못써」, 2025.3.5.
- 아시아경제, 「예산 있으나 나마... '청년문화예술패스' 2년째 반쪽 집행」, 2026.1.19.
- 아주경제, 「세계적 작품 위해 대규모 지원·19세 청년엔 '문화예술패스'」, 2023.12.28.
- 아주경제, 「청년 문화 향유에만 8천억 뺏는다... 문체부 내년 예산 첫 9조원」, 2026.9.4.
- 에너지경제, 「역대 최대 청년예산 43조 분다...李대통령 "경제적 기회 가장 중요"」, 2026.8.28.
- 연합뉴스, 「문화예술패스 한번도 안 쓴 청년 23%... "공연·전시 수도권 편중"」, 2025.8.14.
- 연합뉴스,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률 14%...영화·콘서트 사용 불가 탓"」, 2024.9.18.
- 영남일보,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 저조...울들어 대구 63.6%·경북 58.9%」, 2024.9.11.
- 울산매일, 「"쓸 곳 없다"...울산 청년 34% "청년문화예술패스 '패스'"」, 2025.7.7.
- 일요서울, 「허울뿐인 K-POP 문화강국... '문체부' 300억 사업 두고 실적 올리기 급급?」, 2024.9.24.
- 중소기업신문, 「문체부 예산 첫 9조원대 진입...내년 22.6%↑ "2000년 이후 최대폭"」, 2026.9.4.
- 투데이신문, 「[데이터 파콘]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 74%에도 이용은 절반에 그쳐」, 2026.7.28.
- 파이낸셜뉴스, 「李대통령 "추가 세수, 미래세대 투자 재원으로"」, 2026.7.2.
- 핀포인트뉴스, 「윤영석 의원, 미래대응기금 이관 16개 사업 부실 지적」, 2026.9.14.
- 헤럴드경제, 「문체부 예산 10.3% 늘어난 7.8조원... 'K-컬처' 300조원' 시동」, 2025.9.5.

4. 자료원

-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월·일 단위 검색량 상대지수).
- 썬트렌드 클라우드(Sometrend Cloud) 네이버·다음 뉴스 댓글 자료 ('청년문화패스'·'청년문화예술패스' 언급 기사 2026.8.1.~9.23.).
- 썬트렌드 클라우드(Sometrend Cloud) 간편 분석(언급량·연관어·감성) 결과.
- 예뎀코리아·엠엘비파크·더쿠 게시글·댓글 원문(게시일 2026.8.1.~9.23.).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73호(2026년 8월 4주)」 (8월 25~27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3.1%p), 2026.8.28.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75호(2026년 9월 2주)」 (9월 8~10일), 2026.9.11.